

사회복지시설 대부분 직원임금 적게 지급

재정형편 어렵다는 이유로 보수규정 어겨

대구시내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대부분이 직원임금을 규정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어 종사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복지시설을 지도·감독해야 할 관할구청은 해당 직원들의 진정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조사나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아 묵인의혹까지 사고 있다.

지난달 21일 시내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복지시설법인이 보사부의 '사회복지시설 직원보수 규정'을 어긴채 재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만을 들어 국고보조금이 아닌 복지시설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기본급의 10%와 각종 수당의 20%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매달 월급에서 2만~5만여원씩이 부족되고 있다는 것.

장애인시설인 인제요양원(수성구 수성4가)의 경우 시설 자체 부담 부분인 기본급의 10%가운데 1~3%만 부담하고 있고 2만원씩인 특수직근무수당(보육사)과 가계보조수당도 국가보조금인 1만6천원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제요양원의 L모양(25)은 "부산, 대전등 타지역의 복지시설과 비교해 볼때 2년동안 매월 기본급 1만~4만원과 수당 7천~8천원씩을 적게 받아 관할구청에 여러차례 진정했으나 관할구청은 오히려 원장을 통해 직원교육을 강화하도록 종용했다"고 말했다.

또 시내 46개 사회복지시설(종업원 4백80여명) 가운데 애당원(장애자시설, 수성구 파동), 천광보육원(육아시설, 북구 산격동)등 대부분이 직원 월

급을 적게 지급하는 바람에 고작 20~35만원선의 박봉인 보육사, 취사, 세탁부, 간호사, 영양사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시의 한 관계자는 "구청마다 1년에 2차례씩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임금을 적게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특별감사를 실시해 임금체계를 개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시설 종사자 이직늘어나 해마다 30%이상 이직률...무자격보육사 채용도

부산시내 고아원, 보육원, 장애인재활원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낮은 임금과 어려운 근무조건 때문에 해마다 이직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복지시설들이 무자격자들을 마구 채용하고 있어 원생관리등에서 부실운영이 우려되고 있다.

21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에는 현재 4백93개소의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2천4백여명의 종사원들이 있으나 지난 90년부터 해마다 30%이상씩의 이직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

특히 시설규정에는 일반보육사 5명당 정식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보육사를 2명 이상 채용토록 돼 있으나 박봉과 격무등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바람에 대부분의 시설들이 무자격 보육사를 채용하고 있어 80% 이상이 무자격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각 사회복지시설들이 원생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많은 고아원의 경우에는 무자격 교사들의 고용으로 원생지도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운대구 중1동 217 덕성유아

원은 원생 1백3명에 8명의 교사가 일하고 있으나 정식보육사는 1명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봉급은 보사부 지침에 따라 국고 80%, 시비 10%, 시설자부담 10%로 지급되는데 호봉이 다른 직종에 비해 턱없이 낮게 책정돼 초임이 생활지도원의 경우 29만2천원, 보육사 25만2천원, 취사·세탁부 17만4천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수용 고아가 65명인 남구 광안1동 536-44 사회복지법인 에덴유아원 총무 이기춘씨(59)는 "보모 5명이 하루종일 수용자들을 돌봐야 하는 등 격무 때문에 6개월 이상 견디지 못한다"며 "시설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나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새경향 92.5.2